

정부R&D 제도·시스템 개선 성과 보고회

2026년 R&D 주요 제도 개선 · 정책

발표자 | 성과평가정책국장

일시 | 2026.7.1(수)



1. 연구비 자율성 강화

As Is

행정주의적인 연구비 관리 체계

To Be

연구자 신뢰를 기반으로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연구비 자율 사용 비목인 연구혁신비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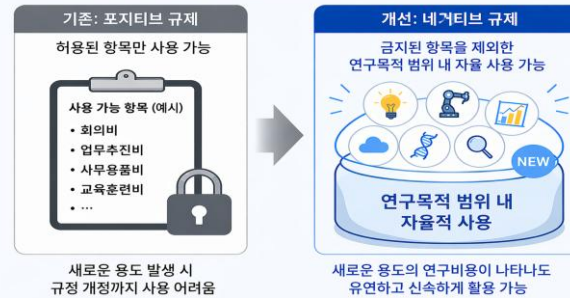
- 직접비 10% 이내 회의비, 출장비, 재료비 등 자율 사용
- 필요한 최소 증빙만 갖춰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



연구비(간접비) 사용 용도 네거티브 방식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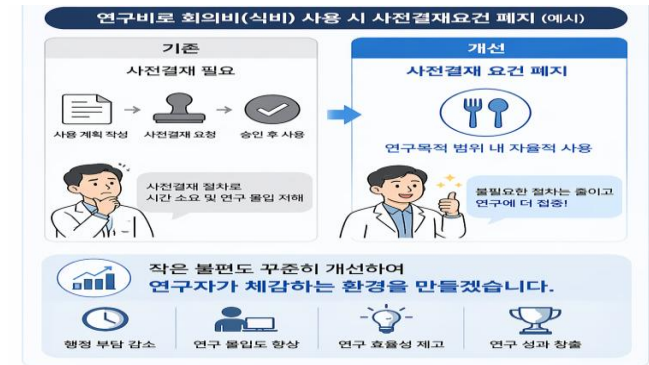
- 사용불가항목(7개) 이외 연구 관련 비용 모두 사용 가능
- 연구 관련 새로운 용도 비용도 유연하게 사용 가능

새로운 용도의 연구비용이 나타나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소하지만 불필요한 규제 개선

- 회의비(식비) 사전 결재요건 등 불필요한 규제 개선 추진



연구비 사용 규정 개정 완료('26.5월) ⇒ IRIS, 연구비시스템 개선 후 본격 시행 예정('26.8월)

2. 행정서식 간소화

As Is

To Be

관리 편의주의적 행정에 따른 비표준서식 난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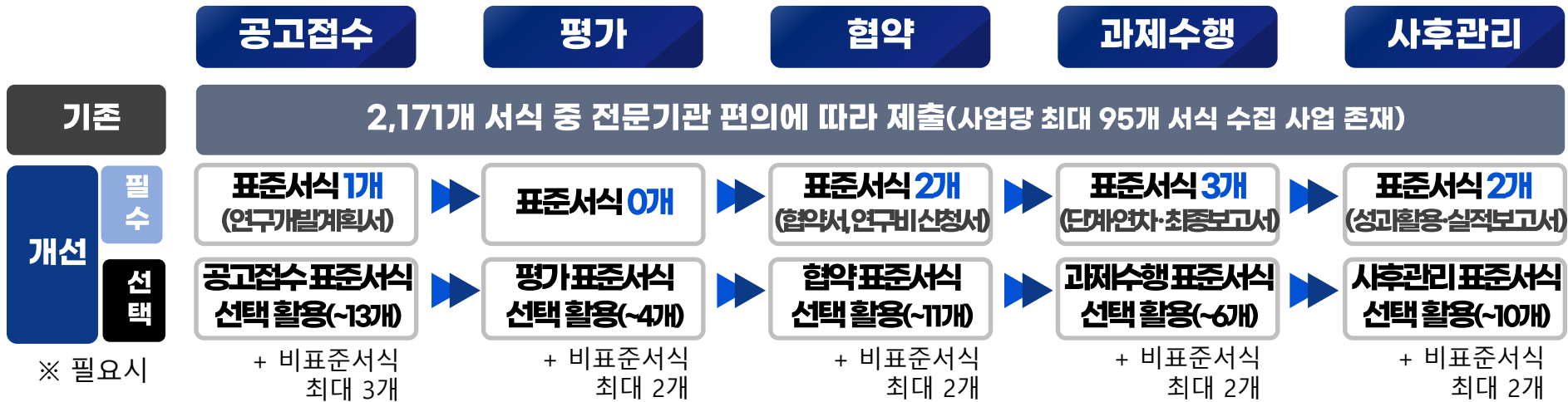
국가연구개발사업 행정서식을 대폭 간소화 → 연구몰입 환경 조성 가속화

불필요한
행정서식
삭제

행정서식 현황(총 2,171개)		간소화 이후		
표준서식	비표준서식	유지(154개)	전산화(65개)	폐지
58개	2,113개	67개(표준서식)	16개(전자적동의)	1,952개
		87개(비표준서식)	49개(시스템연계)	

◇ 연구자가 기관에 제출하는 행정서식을 **92.9%** 삭제 / **연간 약 40만개, 최소 2만 시간**의 연구행정 부담 완화

표준서식
위주 운영



3. 연구자 중심의 R&D시스템 재편

As 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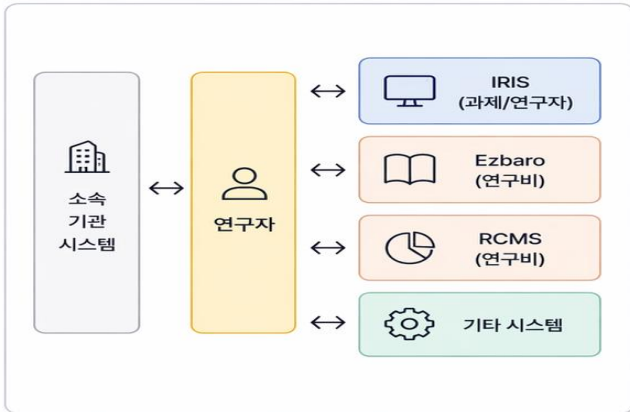
To Be

기관별 분산된 시스템으로 인해 중복 로그인 및 개별 데이터 입력

‘연구24’ 단일 창구 통합 및 IRIS 중심의 R&D시스템 재편으로 연구행정 부담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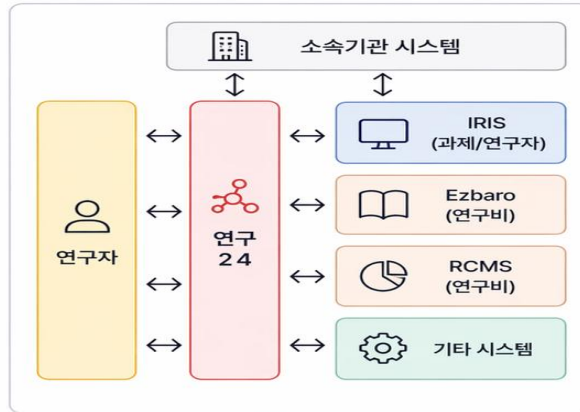
IRIS-소속기관 연계

- ☑ (현재) 연구시스템 각각 접속, IRIS & 기관 중복 정보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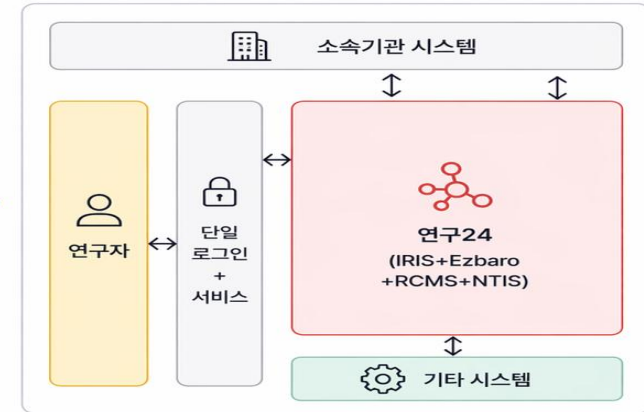
정부R&D통합로그인

- ☑ (금년 내) 1회 로그인 쉐 서비스 이용(연구24), 기관시스템 내 정보변경 시 IRIS 자동반영



4대연구자원시스템통합

- ☑ ('29년) 연구지원시스템 완전 통합
* 정보항목, 집행기준, DB구조 통일



- ☑ (IRIS - 연구기관 자체시스템 연계) 생기연, 고려대 등 4개 기관 시범적용(6월), 연말까지 주요대학, 출연연 등 100개 기관 연계(목표)
- ☑ (성과등록 등 UI/UX 개선) 논문DB(WOS)를 활용한 성과 등록 간소화 등 IRIS 전반에 걸친 UI/UX 개선(8월)

4. AI 기반 연구행정 혁신 지원

As 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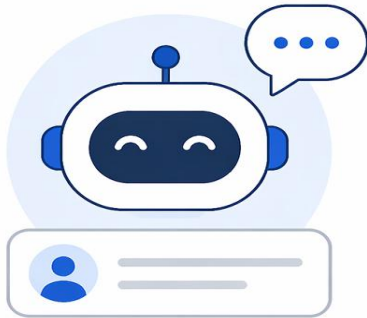
인적판단 중심의 연구관리

To Be

데이터기반의 지능형 연구관리 체계로의 전환

시범서비스

- ✓ 기술적 범용성이 높고 현장 적용이 용이한 우선순위 과제를 선정하여 시범서비스 추진



✓ 평가위원 추천

✓ 챗봇 기반 규정 해석

✓ 연구비 집행 모니터링

✓ 통계 분류체계 자동화

자료 생성·검토

- ✓ 기술 난이도가 높은 핵심 서비스 개발



✓ 보고서 자동 생성

✓ 과제 차별성 검토

✓ 과제관리 안내 지원

의사결정 지원

- ✓ 의사결정 자원이 가능한 업무 보조형 AI서비스 구현



✓ 연구동향 분석 및 예측

✓ 성과확산 전략 수립 지원

✓ 논문 및 특허성과 창출 지원

5. 과감한 도전을 가능케 하는 평가제도 혁신

As Is

To 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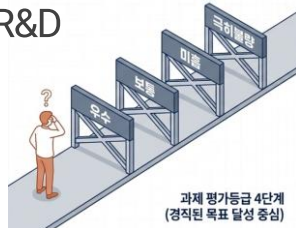
연구자가 목표달성 실패를 걱정하여 안전한 연구만 수행

도전·창의적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 혁신

목표달성을 중시하는 평가·관리 체계로 인해

도전하기 어려운 환경

- 무난한 연구, 성공하는 R&D 선택 관행 고착화



목표·성과의 진정한 가치를 측정하지 못하는

성과평가 한계

- 연구내용의 의의와 파급효과(Out-come)보다 단순 산출물(Out-put) 중심의 평가
- 평가의 전문성·성실성·공정성 우려 및 형식적 평가 문제 제기

도전성

- 연구목표의 혁신성 평가를 위해 선정평가지표 개선('26.1월)
- 도전적 연구를 위한 평가등급 폐지, 실패의 자산화 추진

완료/미완료로 평가등급 개편 ('26년 시범사업 추진중)

'목표는 미달이나 의미있는 수행과정'을 거친 연구는 후속과제 연계 등 지원('27~)

전문성 책임성

- 국내외 우수평가위원 Pool 확충 및 평가위원 실명제 전면 시행('26.1월)

* 해외 과협 연계, 주요과제 연구책임자 평가위원 후보단 등록 의무화 등

'평가과정 세부사항 기록, 보관 일부 시행 중인 평가위원 실명제 및 평가의견 공개 전면 시행

효율성

- 연구보고서 분량상한 도입 등 작성 부담 완화('26.1월)

연차 및 단계 보고서 (기존) 분량 제한 없음 → (개편) 20p 이하

최종 보고서 (기존) 분량 제한 없음 → (개편) 30p 이하

- 상향식 기초연구분야 최종 평가는 학회 발표 대체 등 평가방식 간소화 및 다양화('27년)

6. 국제공동연구 연구비관리 강화 및 IP 확보

As Is

확대되는 국제공동연구 지원·관리제도 사각 존재

To Be

연구비 관리 투명성 제고, IP 확보 지원을 통한 국제공동연구 성과 확대

✓ 해외 송금 근거 부족 및 경직된 연구비 규정

▶ 유연하고 투명한 연구비 관리



(일반형) 관리기준 마련
연구비 사용범위 설정 및
사용실적 보고 근거 마련



(공동기관형) 경직성 완화
국가별 맞춤형 사용기준 설정 또는
국외(우수)기관 자체기준 인정 검토



사후관리 실효성 확보
EU(Horizon Europe) 등 사례를 통해
현실성 있는 의무 이행 장치 모색

✓ 전문성 부족으로 불리한 계약 체결

▶ 연구단계별 밀착 지원으로 IP 협상력 강화



공고단계 협상지위 선점
정부차원의 명확한 협상조건 제시
("Take it or Leave it" 전략)



협상단계 계약전문성 강화
연구자 인식 제고, 연구기관 전문가 확보
지원 및 전문기관 심사 강화



사후 분쟁 발생 시 대응력 제고
국내 시법 또는 중재기관 관할권 설정 등
실효적 IP 보호 장치 마련

7. 민감과제 신설, 보안대책 수립기관 확대 등을 통한 연구보안 체계 강화

As Is

보안과제 위주 보안관리 및 기관별 보안수준 상이

To Be

보안등급 세분화로 중요 연구성과의 선제적 보호 강화

중간보안등급인 '민감과제' 도입

- ☑ 일반과제보다 강화된 보안조치 적용 및 외국 참여에 대해 사전 검증 강화

보안과제

군사전략·국가핵심기술
엄격한 통제 및 관리

중간위험군부재
보안공백 문제

일반과제

일반연구·공개중심
기본 보안관리

보안과제

민감과제

잠재적 국가위험 영향
선제적, 예방적 위험관리

일반과제

신설

국가연구개발기관의

보안관리 의무 강화

- ☑ 범부처 보안지침 마련 및 연구기관별 보안대책 수립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연구기관 확대

보안·민감과제 수행기관, 출연연·특정연, 연 300억이상 정부연구비 수혜대학



기관별 보안대책 포함사항 구체화

보안책임자 지정, 보안교육 실시, 외국·외국인 연구수행 관리 등



연구책임자의 국외수혜정보 보고 체계 관리·운영 개선

국외수혜정보 입력현황 관리, 국외수혜정보 변경시 부처 보고 등

8. 연구비 부정 사용 근절을 위한 제재처분 기준 강화

As Is

위반행위 대비 낮은 제재처분 수위로 인해
부정행위 억제 효과 미약

To Be

연구자윤성을 악용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하여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연구환경 조성

제재처분 부과
최대한도 상향

10년의 범위에서 참여제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고의적·악의적
연구비 부정사용 엄중처분

연구비 부정사용시 위반액의
1~2배 제재부가금 부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7])

고발, 수사의뢰 등
형사처벌 연계 강화

범죄혐의가 있는 부정행위에 대한
고발, 수사 의뢰 등 조치 근거 부재